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의 앞두고 공급망·통상 대응 수단 모색
- 단 신
 - [CBAM] 집행위, CBAM 면제 기준 평가 결과 및 '26년 3분기 인증서 가격 발표
 - [배터리] EU산 배터리 생산·조달 관련 업계 입장과 유럽 배터리 산업 재편 동향
 - [통상] EU 집행위원회, 가입 후보국의 EU 단일시장 조기 참여 확대 방안 검토
 - [방위] 유럽 공동 관심 방위 프로젝트 5개 지정, 유럽방위기금 공모는 역대 최대
- 무역관 행사 안내 * 유럽 공동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PPWR) 대응 웨비나(10.14, 16:00~17:20(KST))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 정	내 용
10.8(목)~9(금)	EU-중국 제2차 무역·투자 협의(베이징)



PPWR 지원 사업 안내

* 링크 클릭 시 사업 참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기관명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링크
KOTRA	EU 통상현안 헬프데스크	PPWR 등 EU 통상현안 관련 기업 애로 상담	링크
KTR	EU PPWR 대응 원스톱 서비스	시험·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대응 지원	링크
	'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링크
KCL	PPWR One-stop Compliance	수출바우처를 통한 시험·TD·DoC 검토 통합 지원	링크
aT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컨설팅)	PPWR 관련 자문, 검사·문서작성·평가 지원 * 예산 소진 시 마감	링크



EU,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의 앞두고 공급망·통상 대응 수단 모색

- ◎ EU 집행위원회는 핵심 부문의 의존도 완화와 기업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공급망 다변화 패키지 ‘DiversifyEU’ 도입을 위해 공개 의견 수렴 개시
- ◎ 10.8~9일 EU-중국 무역·투자 협의를 앞두고, 프랑스·독일 등 회원국은 EU 차원 통상 수단 강화 요구, 10.15~16일 EU 이사회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 심화 전망

■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다변화 조치 ‘DiversifyEU’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

- 역내 핵심 산업·기술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신규 정책 패키지 마련 추진
 - 집행위원회는 특정국 및 소수 공급자에 집중된 역내 핵심 산업·기술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산업 정책을 통합한 ‘DiversifyEU’ 패키지를 도입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9.29~10.27)
 - 의견 수렴 요청서는 특정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부문의 공급망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특히 ‘DiversifyEU’는 기존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공급처 대체 장려 인센티브, 기업의 의존도 완화 비용 지원, 경제 안보 위험 대응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설계될 예정
 -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26.4분기 중 다변화 및 경제 회복력에 관한 보고서 발표와 함께 신규 조치를 제안할 전망

■ EU의 신속한 통상 조치 강화를 위해 ‘EU판 301조’ 도입 논의 확대

- 프랑스와 독일, 공동 서한을 통해 신속 통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10.5)
 - 10.5일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무역의 무기화와 시장 왜곡 관행이 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기존 통상 수단을 신속히 활용하고 신규 법적 수단을 포함해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
 - 양국은 구체적으로 ① 특정국·공급처에 대한 EU의 의존도와 공급망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변화 조치와 ② 제3국이 정치·경제적으로 EU 시장에 심각하고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통상 대응 수단을 제안
 - 특히, 통상 대응 수단은 집행위원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회원국의 역가중다수결 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도록 국가 중립적(country-agnostic) 제도로 설계할 것을 제안

(참고) EU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e)과 역가중다수결(Reverse Qualified Majority Vote)

가중다수결은 최소 회원국 55%가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해야 의결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집행위원회의 법안 제안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필요. 한편, 역가중다수결은 가중다수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구조로, 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행입법 영역인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필요시 해당국 제품의 EU 역내 시장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
- 프·독 공동 서한은 10.8~9일 EU-중국 무역·투자 협의를 위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송부된 것으로, 현지 언론 Politico는 공동 서한이 EU 측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분석
- 협의 후 예정된 10.15~16일 EU 이사회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은 협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프·독 제안이 향후 EU 차원의 공식 통상 정책 및 대응 수단으로 발전될지에 귀추가 주목됨

○ 유럽 내 중국산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 신속 통상 수단 논의 확대

-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Chatham House)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 확대와 유럽 산업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기술·제조업 경쟁력 확대가 유럽 산업에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 「China Shock 2.0 and Europe's Industrial Future」([26.9](#))

- 이에 보고서는 전략 분야 경쟁 심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가속화, 안보 민감 분야와 비민감 분야의 투자 정책 차별화, 수입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美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신속 대응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중국, EU의 대중 통상 수단 강화 움직임에 반발... 양측 통상 긴장 지속

○ 중국 상무부, EU의 중국 기업과 제품을 겨냥한 신규 조치 도입 시 단호한 대응 예고

- 중국 상무부는 프·독 공동 서한 발표에 앞서 9.29일, EU가 보호주의·일방주의적인 조치를 도입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언급
- EU가 중국산 화학·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EU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서 양측 간 통상 긴장 지속

* 중국 상무부(10.3), 중국 업계 제소를 바탕으로 EU산 p-니트로톨루엔에 반덤핑 조사 개시

• 자료 : EU 집행위([9.29](#)), Politico([10.5](#)), FT([10.3](#))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unojin@kotra.or.kr)

■ [CBAM] 집행위, CBAM 면제 기준 평가 결과 및 '26년 3분기 인증서 가격 발표

- ① (면제 기준 평가)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연간 면제 기준인 수입량 50톤에 대한 첫 번째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9.30)
 - '25.4.1일~'26.3.31일 간의 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면제되는 내재 배출량은 총 내재 배출량의 0.87%로 법적 상한(1%) 이내인 것으로 확인*
 - * 집행위는 매년 4.30일까지 직전 12개월 데이터를 토대로 면제 배출량 비중이 전체의 1% 이하인지를 평가. 부속서 VII의 방법론에 따라 면제 기준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값과 현행 기준의 차이가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위임법을 통해 기준값 조정(CBAM 규정 제2a조 3항)
 - 이에 따라, CBAM 면제 기준은 현행 50톤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

(CBAM 면제 기준) 수입자별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연 합산 수입량이 50톤 이하이면 CBAM 적용 면제. 집행위는 50톤 기준 적용 시 전체 수입기업의 91%가 면제되는 반면, 제외되는 내재 배출량은 총 내재 배출량의 0.73%에 불과해 환경적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수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

- 한편, 독일 철강 무역기업 Gerber Group은 평가 결과의 공개 지연과 산정 근거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10.5)
 - 법정 평가 기한(4.30일)보다 약 5개월 뒤 결과가 공개됐으며, 발표 내용도 면제 배출량 비중(0.87%) 외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 대상 수입자 수, 구체적인 산정 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
 - 면제 기준이 수입기업의 CBAM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EU가 세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 ② (인증서 가격) 집행위는 '26.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을 82.32유로로 발표(10.5)
 -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을 가중평균해 산정. '26년에는 분기별로 가격을 적용하고, '27년부터는 주간 단위로 발표할 예정

〈'26년도 CBAM 인증서 가격 공시 일정 및 가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발표 일정	'26.4.7일	'26.7.6일	'26.10.5일	'27.1.4일
인증서 가격	75.36유로	75.28유로	82.32유로	-

자료 : EU 집행위원회

• 자료 : EU 집행위([링크①](#), [링크②](#)), Gerber Group([10.5](#))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 [배터리] EU산 배터리 생산·조달 관련 업계 입장과 유럽 배터리 산업 재편 동향

- EU 산업가속화법(IAA)의 배터리 현지화 요건*을 두고, 공급 여력과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와 조기 수요 창출을 강조하는 환경단체 간 입장 대립

* 전기차 배터리 셀, 양극재 등 주요 구성요소를 EU 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법안 발효 후 6개월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 예정('26.3월 EU 집행위 초안 기준)

- 유럽자동차제조회사(ACEA)는 배터리 공장 증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원자재와 중간재 역외 의존으로 높은 생산비용*이 지속되는 만큼, 배터리 현지화 의무 적용을 3~5년 유예할 것을 요구

* EU산 배터리 셀을 탑재할 경우, 차량당 최대 2,10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럽 환경 단체인 T&E(Transport & Environment)는 역내 셀 생산이 '27년 법인용 전기차, '30년에는 보조금 대상 개인용 전기차 수요까지 대응 가능하며, EU산 셀 적용에 따른 차량당 추가 비용도 '30년 약 500유로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

- 유럽 배터리 산업은 현지 생산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작투자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 기반 재편이 진행 중

- 독일 폭스바겐(VW)과 중국 배터리 제조사 고션(Gotion)은 배터리 셀·양극재 사업에 총 32.2억 유로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 비EU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 배터리 공급망 확대 및 역내 편입 강화

* 주요 내용 : 스페인 29.1GWh, 슬로바키아 8.4GWh 규모의 셀 생산, 모로코에 10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 등. VW는 스페인, Gotion은 슬로바키아와 모로코 사업의 지분을 각각 51% 보유

- 한편 독일 배터리 제조사 VARTA AG 주요 계열사 4곳이 10월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유럽 배터리 산업의 사업·재무 부담도 부각되면서, 현지화 요건과 함께 투자·수요 지원 필요성도 확대

• 자료 : ACEA(9.30), T&E(10.1), Electrive(9.28), VARTA(10.2)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 [통상] EU 집행위원회, 가입 후보국의 EU 단일시장 조기 참여 확대 방안 검토

- EU 집행위원회는 가입 후보국의 정식 가입에 앞서 EU 단일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Politico가 입수한 집행위원회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EU 규제 정합성 및 규제 이행 역량이 확인된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국의 EU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산업 협력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후보국의 조기 시장 참여가 EU 가입 준비를 돕는 동시에 유럽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유럽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며 제3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에는 향후 EU 가입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EU 단일시장 접근과 경제적 혜택은 후보국의 EU 외교정책 협력과 민감 기술 보호를 전제로 하며, 관련 조건 미충족 시 참여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을 중단 및 철회할 수 있음
- 반도체,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우주 등 민감 산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려면 후보국은 투자 심사, 수출 통제, EU 제재 이행과 민감 기술 보호에도 협력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후보국의 EU의 외교정책 협력 수준과 함께 핵심 분야의 의존도, 인프라 및 공급망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시장 참여 수준 검토 시 고려할 계획임
- 또한 후보국이 EU 가입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개혁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가입 후에도 제도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자료 : Politico Pro([9.30](#))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노효주(hyoju.no@kotra.or.kr)

■ [방위] 유럽 공동 관심 방위 프로젝트 5개 지정, 유럽방위기금 공모는 역대 최대

- EU 이사회는 5개의 주요 방위 프로젝트를 유럽 공동 관심 방위 프로젝트(EDPCI, European Defence Projects of Common Interest)*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 결정을 9.28일 채택했으며 10.2일부터 발효됨
- * 개별 회원국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방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EU 차원의 협력틀로, 회원국 및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할 수 있음
- 5개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드론·대드론, △해양 및 해저 방위, △우주, △EU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동부 국경 안보 강화 등임
- 이번 결정은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 규정에 따른 것이며, EU 이사회 공식 채택으로 해당 방위 프로젝트는 EDIP를 통한 EU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 EDIP '25~'27년 총예산 15억 유로 중 EDPCI 지원에 3억 2,500만 유로가 배정됨

〈방위 프로젝트별 참여국 및 규모〉

구분	참여국	사업 규모 (참여국 예산 합산 추정치)
드론·대드론	EU 26개국(몰타 제외), 노르웨이·우크라이나	30~50억 유로(~'33년)
해양 및 해저 방위	EU 15개국, 노르웨이·우크라이나	430~720억 유로(~'45년)
우주	EU 18개국, 노르웨이·우크라이나	최대 240억 유로(~'34년)
EU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EU 17개국, 노르웨이·우크라이나	550~800억 유로(~'40년)
동부 국경 안보 강화	EU 15개국, 노르웨이·우크라이나	85~100억 유로(~'32년) 최대 1,000억 유로(~'36년)

- 한편 유럽방위기금(EDF, European Defence Fund)* '26년 공동 방위 연구 개발 공모에는 '21년 기금 출범 이후 사상 최다 수준인 612건의 제안서가 접수됨
 - * 회원국 간 공동 방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에 설립된 서로 다른 기업 및 연구기관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함. '26년부터는 우크라이나도 신청 가능
 - '26년 공모 예산은 10억 600만 유로로, 상당수의 과제가 이전 EDF 사업 성과를 토대로 양산 및 도입이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유럽형 대기권 내 요격 미사일, 차세대 주력 전차, 다연장 로켓 발사기, 반자율 해군 함정 등
 -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6,000만 유로 규모의 비주제형 공모에 다수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설명
 - 제출된 제안서는 요건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7.3월까지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

• 자료 : EU 관보([10.1](#)), EU 집행위원회([10.2](#))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송지현(jhsong_a@kotra.or.kr)



■ 유럽 공동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 목 적
 - '26.8.12일부터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주요 규정과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안내
 -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유럽 주요국의 제도 운영 현황 비교
 - 기업의 실제 대응 사례를 통해 실무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및 EU 시장 진출 관련 규제 리스크 완화 도모

- 일 시 : '26.10.14(수) 한국(KST) 16:00~17:20
중부유럽(CEST) 9:00~10:20, 영국(BST) 8:00~9:20
- 장 소 : 온라인(Zoom)
- 프로그램 (* 한국 시간 기준, 참가신청 이메일로 추후 Zoom 링크 전달 예정)

시 간 (KST 기준)	내 용		연 사
16:00~16:05 (5')	개회사		김연재 본부장 KOTRA 유럽지역본부
16:05~16:25 (20')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핵심 내용		브뤼셀무역관
16:25~17:05 (40')	유럽 주요국별 EPR 제도 (국별 10분)		
	16:25-16:35	독일	함부르크무역관
	16:35-16:45	헝가리	부다페스트무역관
	16:45-16:55	체코	프라하무역관
	16:55-17:05	영국	런던무역관
17:05~17:15 (10')	PPWR 기업 대응 사례		식품기업(오뚜기라면)
17:15~17:20 (5')	마무리		브뤼셀무역관

- 참가신청 : 하단 링크 또는 QR 코드 스캔 통해 신청서 작성
* 참가신청 링크 : <https://survey.wiseon.io/survey/293>
- 신청기한 : '26.10.13(화) 한국 시간 23시 59분까지
- 문의 : KOTRA 브뤼셀무역관 조기철 과장(starofjihak@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 업	품 목	CN 코드	유 형	조 치	대상국	발표일
플라 스틱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39041000	반덤핑	조사개시	멕시코, 대만, 한국, 중국	'26.9.23
화학	셀룰로스 에테르 (Cellulose ethers)	391239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한국	'26.9.24
철강	강철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731210	반덤핑	조사개시	튀르키예, 태국, 인도	'26.9.24
기타	완두콩 단백질 (Pea protein)	3504, 2106, 2303, 2309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9.25
철강	스테인리스 냉강압연제품(SSCR)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7219, 7220	상계관세	만료재심	인도, 인도네시아	'26.9.30

EU 분야별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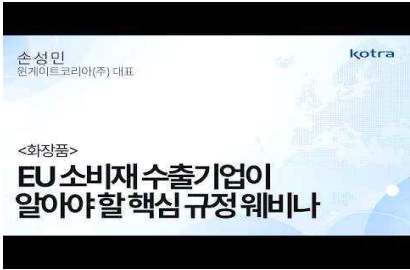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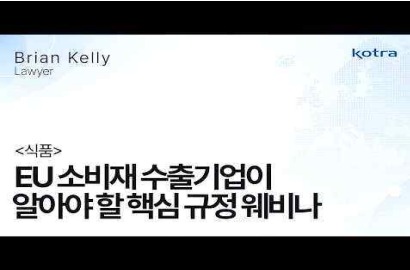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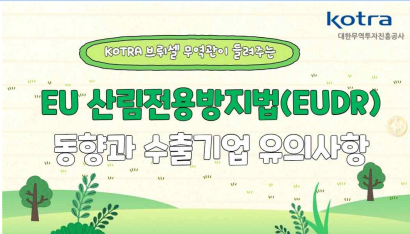
분 야	내 용	수렴 기간	링크
R&I	Horizon Europe 유럽 파트너십 공동사업단 이행 체계 개편 위한 의견 수렴	7.10~10.16	링크
산업	EU 이중용도 수출입 규정 관련 의견 수렴	7.23~10.15	링크
에너지	에너지·타이어 라벨링 규정 간소화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8.20~10.15	링크
환경	배출권거래제(EU-ETS) 연계 제조업·해운 분야 개정 관련 의견 수렴	8.20~10.20	링크
조달	국제조달수단(IPI*) 개선 검토 위한 증거 수집(적용 범위, 효율성 등) *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9.8~12.1	링크
조세	조세 분야 옴니버스 지침 초안 의견 수렴	9.10~11.5	링크
조달	EU 공공조달법(EU public procurement rules) 초안 의견 수렴	9.15~11.10	링크
소비재	완구안전지침(2009/48/EC)상 유해화학물질(BPA, 향료 Lilial 등) 기준 현행화 위한 집행위 지침 초안 의견수렴	9.17~10.15	링크
순환경제	비OECD국의 비유해 폐기물 수입 허용 목록 관련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9.18~10.16	링크
식품	저위험 농약 7종의 승인 갱신 절차 조정 관련 집행위 결정 초안 의견 수렴	9.18~10.16	링크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배터리 규정 위임법 초안 의견 수렴	9.29~10.27	링크
통상	대중 통상 조치 'DiversifyEU' 도입 위한 의견 수렴	9.29~10.27	링크
화학	REACH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초안 의견 수렴	9.29~10.27	링크

브뤼셀무역관 발간 자료

(과거 보고서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 번호	제 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집행위원회 제안 공공조달법 초안의 주요 내용	2026. 9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철강 쿼터 규정 및 조강국 증빙 의무화 관련 우리기업 유의사항	2026. 9월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사이버 복원력법(CRA) 및 지침문서 주요 내용 Q&A	2026. 9월
경통리포트26-19	EU 일반특혜제도(GSP) 개정 주요 내용	2026. 8월
경통리포트26-18	EU 소액 소포 과세 시행 및 관세법 개혁 정치적 합의 내용	2026. 8월

📺 브뤼셀무역관 영상 자료

썸네일(※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주요 내용
 손성민 원케이코리아(주) 대표 <화장품> EU 소비자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	○ EU 화장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 ('26.9월) - EU 화장품 성분 적합성, 라벨링, 광고 및 클레임 규제 등 주요 화장품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Brian Kelly Lawyer <식품> EU 소비자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	○ EU 식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웨비나 ('26.9월) - EU 식품 안전 표시 의무, 건강 표시 및 첨가물 관리 등 주요 식품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세계이슈 특목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대응 웨비나 PPWR 핵심 의무사항 및 우리 기업 대응 EU 집행위원회 제 2차 FAQ 기반 강지숙 차장 KOTRA 브뤼셀 무역관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26.8월) - 8.12일부터 적용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핵심 의무사항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세계이슈 특목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현황과 전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최근 입법 동향 ('26.8월) - 최근 EU 내에서 논의 중인 하류제품 확대 및 CBAM 제도 강화 방안 등 CBAM 관련 현지 최신 논의 동향 소개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김도연 차장 KOTRA 브뤼셀 무역관 3월	○ EU 통상규제의 본격 시행과 기업 유의사항 ('26.6월) - EU의 역내 경쟁력 강화 기조 및 핵심 통상규제의 주요 동향,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소개
 KOTRA 브뤼셀 무역관이 들려주는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웨비나 ('26.6월) - '26.12월 EUDR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주요 내용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도 제고
 EU 수출기업 필독! 유럽 현지 변호사가 들려주는 EU PPWR 대응 가이드	○ EU 순환경제 규제(PPWR·ESPR) 대응 웨비나 ('26.5월) - '26년 하반기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의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